

[종합·해설]

민선 4기 출범 1년 광주시장·전남지사에 듣는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자치 4기가 꼭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동안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끌어온 광주시와 전남도는 문화중심도시와 J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자치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일부 대형사업 추진을 둘러싼 중앙정부 또는 정치권과의 갈등이 초래되면서 난항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민선 4기 임기 2년째를 맞는 박 시장, 박 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대규모 개발 차질 없게… 자치기반 다질 터”

박 광 태 광주시장



박광태 광주시장은 1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의 재정부담 감소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문화전당 주변 핵심 문화지구의 도심 리모델링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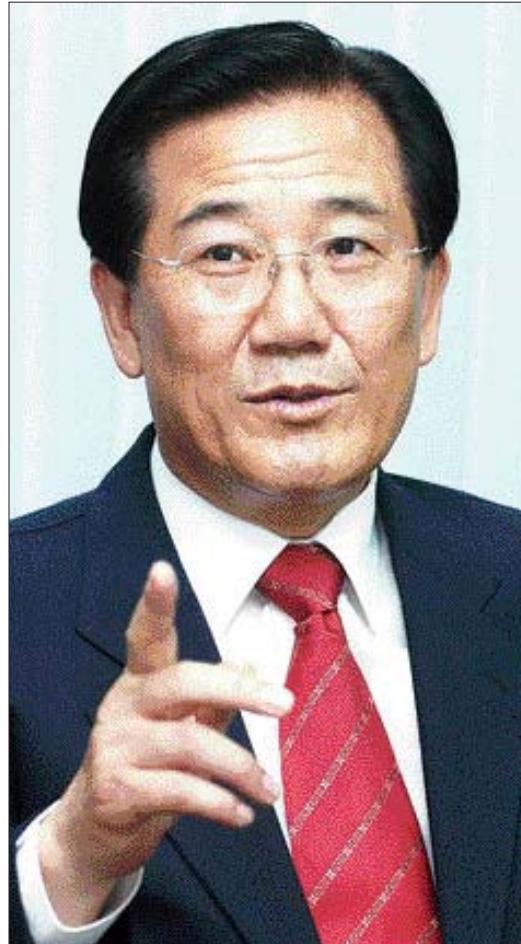
—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성과와 계획은?

▲ 올 1·4분기까지 2만 7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의 20%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 4월 중 취업자는 63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만4천명이 늘었고, 실용적 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3만4천명(15.2%) 증가하는 등 고용 구조가 질적으로도 나아졌다.

일자리 2만 7천개 만들어 20% 달성

도시철도 2호선은 경전철로 시공

꼭 특1등급 호텔 들어서게 하겠다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축소하고 차세대 전자금융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 임기가 끝나는 2010년까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

▲ 문화관광부에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강, 국립아시아현대미술관 설치, 뮤지컬·오페라 등 대형 공연이 가능한 전문공연장(2천석) 설치 등을 건의하고 있다.

문화복합산업단지(3조 6천억원), 문화산업 콤플렉스(2천498억원) 조성, 문화전당 주변 도심 리모델링 사업의 전액 국비추진 등도 요구하고 있다.

— 자기부상열차 사업에 유치 실패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방향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 순환선인 2호선이 건설돼야 주요 대학과 광주역·터미널·시청·주요 택지지구에 걸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호선(km당 800억원)의 절반 수준인 km당 427억원 정도가 드는 경전철로 2호선을 시공할 방침이다.

— 특급호텔 건립과 관련 ‘인센티브 논란’이 있는

데.

▲ 호텔은 일반적으로 유통률이 높은 상업지역에 건축하는데 예정 부지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항공 고도 제한구역으로 45m 이상 지을 수 없어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경실련 등에서 말하는 500억원, 1천억원 특혜는 터무니없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로 인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히도록 할 것이다. 또 특 1등급 호텔을 짓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 관리운영권 회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기획예산처가 국가 신인도와 외자 유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재협상해보라는 중재를 해왔고, 사업자 측도 재고를 요청해 재협상 중에 있다. 반드시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제2순환도로가 되도록 하겠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는 1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서남권개발, 여수세계박람회 등 전남 발전의 핵심이 되는 대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는 한편, 친환경농업 등 미래자원 산업의 기반도 다지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의 자율권을 늘려 주어야 한다”며 각종 규제가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선 4기 1년을 되돌아본다면.

▲ 민선 4기 1년동안 전남 도약의 큰 그림을 그렸다. 전남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밭굴, 친환경농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한 정부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민선 4기 2년째부터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주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업과 신소재·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자원산업의 기반을 다지겠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이 있는데.

▲ 문제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박 준 영 전남지사

는 것이다.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균형발전 실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산업단지를 만들려해도 토지나 해양과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다. 산단조성이나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을 늘리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보통 2~3년 걸린다. 정부가 자자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넘겨주고 지방의 자율권을 늘려줘야 한다.

— J프로젝트, 서남권발전 종합계획,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 대형개발사업은 상당 부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다. J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 사회간접자본 보강 등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 대규모 프

신성장동력 본격 추진에 역점

J프로젝트 등 이젠 속도내야할 때

F1 특별법 한나라당 협조 절실

로젝트들은 그동안 준비단계를 거쳤고 이제는 속도를 낼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대회처럼 새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차근차근 일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 최근 국회에서 F1특별법 통과가 무산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한마디로 ‘유감’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의 적극 협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회기에 반드시 F1특별법이 통과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그 사이 (F1경주장 부지 간척지 우선 사용승인 같은)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합쓰겠다.

— 공직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도 많은데.

▲ 공무원 퇴출같은 인위적인 제도는 시행하지 않겠다. 대신 공직자들이 일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일을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겠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주민소환, 주민손에 달렸다



민선 4기가 1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광주·전남 민선 4기는 1~3기 11년동안 뿌리내린 ‘풀뿌리 민주주의’의 계화(開花)를 다짐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자치행정 수장인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사법처리된 단체장이 10명(1명은 배우자)에 달한다. 겨우 임기의 4분의 1이 지난는데도 절반 가까운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개인비리, 직무상 하자로 징계를 받았거나 재판에 불려나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공사사업자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몰수·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박희현 해남군수는 승진 인사 및 보조금 수령 명목으로 직원들과 업자로부터 모두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박 군수로부터 결혼 축의금 등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주민 55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받은 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화순군과 신안군은 민선 4기를 연 5·31 지방선거가 끝난 지 5개월도 채 안돼 군수를 새로 뽑아야 했다. 전형준 전 화순군수와 고길호 전 신안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해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른 것이다.

특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단체장 7명 가운데 3~4명은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시·군은 을 연말 대통령 선거와 함께 또 다시 단체장 재·보선을 치러야 할 형편이다.

위법·비리 단체장의 중도 하차는 행정 과행과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화순군과 신안군은 지난해 군수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11억여원의 지방비를 투입했다. 민선 3기에는 전남지역에서만 6차례의 재·보선 비용으로 150억원을 쏟아부었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또한 막심했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시·도 광역의원 가운데 2명이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해 다시 선거를 치렀고 2명의 시의원은 2심까지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았다. 기초의원도 6명이 의원직을 끊어 지난 4월 25일 재·보선을 치러야 했다.

지금까지는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부패하거나 무능해도 이렇다할 제재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이 달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민소환제의 본격 시행으로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임기 중 퇴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민선자치 시행 이후 단체장들은 경영마인드와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개선됐지만 도덕성이나 책임임행 면에서는 악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제 주민들이 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 주민소환제의 정착은 결국 ‘주민’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who@kwangju.co.kr

베트남 국제결혼

제2회 당신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오자이 국제결혼이 특별합니다.

[세부내용]

[결혼증명서]

[아오자이 국제결혼]

[062)232-8966
010-5256-8966]

A photograph showing a traditional Vietnamese wedding ceremony with people in traditional dress gathered around a table.